

안녕하세요, 벌써 2026년의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은 연초에 세운 기업 전략과 ESG 목표를 실행 관점에서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 2월은 국내외에서 원전, 근무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규제가 변화·확대되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2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Contents

- 01 ESG Keyword 【 원전 · 근무체계 개편 · 스튜어드십 코드 】
- 02 ESG Trend 【 2026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 형식적 대응에서 실질적 개선으로 전환 】
- 03 ESG Policy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 2026년 중대재해 관련 제도 현황 】
- 04 ESG Event 【 한국ESG연구소 「2026 상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 대신경제연구소 「2026 거버넌스 인사이드 포럼」 성료 】
【 대신경제연구소, 아름다운가게 「그물코 프로젝트 2025」 사회적 가치 분석 】

Environmental Issue: 원전

ESG Keyword

원전·재생E 재논의 국면...12차 전기본 앞 에너지믹스 공론화 '충돌' (뉴스1, '25.12.30.)

<https://www.news1.kr/society/environment/6023025>

이재명 정부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공론화의 핵심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로,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찬반 양측 의견을 모으고 있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공론화 자체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설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여론조사서 60% 이상 "신규 원전 건설해야" 응답 (연합뉴스, '26.01.21.)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04000530?input=1195m>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을 '반드시' 또는 '가급적'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설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속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세계적 추세'라는 전제가 제시됐고, 조사 대상에 미래세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대표성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지만,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인되면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원전 건설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下 원전 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3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에 포함(연구·개발·실증/신규건설/계속운전)
- 녹색경제활동은 3가지 원칙 준수 필요
 - 환경목표 기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중 1개 이상에 기여할 것
 -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위 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최소한의 보호장치 준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 위반 금지(MS: Minimum Safeguards)
- 원전 신규건설은 2045년까지 건설허가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계획 및 법률 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 모두 준수,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등 일정 기준 충족 필요)
- 원전 계속운전도 2045년까지 계속운전 허가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위 '최신기술 기준 모두 준수' 요건 제외. 단,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필수)

* 2025년 10월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중. 지역 수용성 문제 등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관건

ESG Keyword

"2030년까지 1700시간대"...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뉴스1, '25.12.30.)

<https://www.news1.kr/economy/employment-labor/6023668>

노사정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약 1,700시간대로 낮추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 등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 선언은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 시간 축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혁신의 과제로 정의하면서 향후 관련 법제화와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높아 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생 문제 완화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등 현장의 비용 부담 문제는 향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유럽화되는 韓 노동환경... 교수들 62% "4.5일제 시기상조" (문화일보, '26.01.02.)

<https://www.munhwa.com/article/11558093>

문화일보가 전국 대학교수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6명(61.9%)이 현 정부의 주 4.5일제 추진을 "경제성장을 하락과 낮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특히 공학(75.7%) 및 자연과학(60.8%) 분야 교수들의 반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벨기에는 근로자에게 주 5일에서 주 4일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총 근로시간은 같다. 미국 콜로라도주 역시 주 40시간 근무 규정 하에서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2000년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이 치솟자 다시 근로시간 연장과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입법화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임금 깎이면 반대, 안 깎으면 찬성"... 주 4.5일제 '어쩌나' (헤럴드경제, '26.01.1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7130>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시범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들은 임금 감소 여부를 수용성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임금이 줄어드는 조건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5.6%에 그친 반면, 임금이 유지될 경우 찬성 비율은 74.3%로 급증했다. 이는 생활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수용 여부를 좌우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응답자 다수는 정당한 보상이 전제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임금 보전과 생산성·성과 보상, 디지털 전환을 연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 원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5\).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金 1시간 일찍 퇴근"...은행권 '주 4.9일제' 속속 도입 (노컷뉴스, '26.01.20.)

<https://www.nocutnews.co.kr/news/6458692>

은행권에서 금요일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주 4.9일제'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주 4.9일제는 금요일에 1시간 조기퇴근하는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주 4.5일제의 전 단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최근,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하나·신한은행 역시 비슷한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IBK기업은행은 특정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요일과 금요일 퇴근시간을 1시간씩 앞당기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해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SG Keyword

스튜어드십 코드 10년만에 손질...투자 쏠과정으로 확대 (한국경제, '26.01.18.)

<https://v.daum.net/v/20260118165234952?f=p>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손질돼 투자 전 과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로 상장 주식 투자 이후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 선정부터 투자 이후 관리까지 책임투자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환경·사회적 요소를 투자 판단 과정에 반영하고 비상장 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올 상반기 개정과 함께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해 각 기관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율 지침 수준에서 투자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게 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나선다 (매일경제, '26.01.19.)

<https://www.mk.co.kr/news/business/11937241>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ESG 전략을 전방위로 확대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연금 수익을 함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267곳에 달해 이사회와 지배구조위원회의 독립성·성과·보수 연계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 영역에서도 치매 환자 등을 위한 공공신탁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공공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금 기금 운용이 투자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해야" (매일경제, '26.01.23.)

<https://www.mk.co.kr/news/politics/1194154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현 체계에 대해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기관투자자 간 연대 의결권 행사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짚으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 스튜어드십 코드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또는 '규범'

※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신경제연구소 ESG In-depth Report 참고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사항과 시사점 : 대신경제연구소 | 연구보고서](#)

[2026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개정사항 및 시사점 : 대신경제연구소 | 연구보고서](#)

ESG Trend

2026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 형식적 대응에서 실질적 개선으로 전환

한국ESG연구소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를 발간하였으며,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법 개정 및 공시제도 개편에 대한 기업의 대응,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 ▲한국ESG연구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 핵심 안건

【요약문】

| 기업들의 상법 개정 대응에 주목: 실질적 개선 vs 형식적 대응 | 2025년 공포된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 rule 강화 등)은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시행되므로(2026년 7월 및 9월),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기업들이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선제 정비'와 규제 적용 전 '방어적 기제' 작용이 혼재하는 시즌이 될 것임.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이 패키지로 설계될 가능성이 큼.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정 준수'를 넘어, 우회·형식적 대응(예: 이사회 정원 조정, 우회적 절차 설계로 사실상 일반주주 영향 축소) 여부를 구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방안 점검에 따른 기관투자자 '설명 책임' 정량화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은 참여기관의 이행 수준을 12개 점검항목으로 체계화하고, 의결권 행사 정책·내역 공개 및 주주활동 보고 등 의결권 행사 내역의 근거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 것임.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도 의결권 행사 논리(정책·판단·결과)를 더 촘촘하게 제시해야 하는 시즌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공시제도 개편: '결과 공시'에서 '근거가 남는 공시'로 | 2026년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반대 비율 등 표결결과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공시제도는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목표로 한 단계 강화됨. 이는 ① 안건 설명의 논리성, ② 반대 발생 사유·커뮤니케이션의 충실도, ③ 이후 개선 이행의 추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이 될 것임.

| 한국ESG연구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의 주요 내용 | 한국ESG연구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의 주요 사항은 ①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 ② 전자주주총회(현장병행형 중심) 기준 정교화, ③ 독립이사 기준 및 공시 요구 강화, ④ 성과보수 정책·Say on Pay 관점의 판단기준 보완, ⑤ 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 기준 정렬, ⑥ 독립이사·감사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부여 시 이해상충·독립성 훼손 방지, ⑦ 퇴직금 등 주요 보상 결정권한의 주주총회 통제 강화 등으로 요약됨.²

| 2026년 정기주주총회 'Focus On' | ① 정관변경 안건은 '법령준수 목적의 형식적 정비'인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인지 구분하여 평가, ② 이사·감사(위원) 선임은 규정 변경과 결합된 설계 효과(선임 가능성·일반주주 영향·이사회 기능)를 함께 점검, ③ 보수 한도 승인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안건은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까지 감안해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절차적 정당성의 충실도 점검

¹ 한국ESG연구소(KRESG)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자회사로서, 2014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자문을 수행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하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는 요약본으로, 풀 버전은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 리서치 > Issue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음

² 2026 한국ESG연구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의안분석](#)에서 다운로드 가능

ESG Trend

【 본문 】

I. 최근 법·제도 개정 및 자본시장 동향

1. 상법 개정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의미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명칭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공포되었으나, 조항별 시행 시점의 차이로 인해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시행 직전’의 마지막 정비 시즌으로서의 의미가 큼.
-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26.9. 시행)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인→2인, '26.9. 시행)를 앞두고, 기업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지 혹은 이사 시차 임기제 등을 통해 방어권을 구축할 지가 관전 포인트임.

표 1. 1~2차 개정 상법 주요 내용

개정 차수	구분	개정 대상	개정 내용	시행일
1차 개정 (‘25.07.22 공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제382조의3)	주식회사	(전) 회사 → (후) 회사 및 주주	2025.07.22
	‘독립이사’ 명칭 제도 (제542조의8 등)	상장회사	(전) 사외이사 → (후) 독립이사	2026.07.23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상향 (제542조의8)	상장회사*	(전) 이사 총수의 1/4 이상 → (후) 이사 총수의 1/3 이상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전(3인 이상 이사 및 과반수 독립이사 선임)과 동일	2026.07.23 (‘27.07.22까지 요건 충족 필요)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의결권 제한 규제 강화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출시에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후) 모든 감사위원(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포함)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2026.07.23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제542조의14-1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그 외 상장회사 선택적 개최 가능, 정관 배제 가능 **향후 개정될 상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대상 변동 가능	2027.01.01 (시행 후 최초 이사 선임 주주총회 소집부터 적용)
2차 개정 (‘25.09.09 공포)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제542조의7)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전)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 (후)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2026.09.10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제542조의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전) 기본 1인(2인 이상은 정관 하에 가능) (후) 기본 2인(3인 이상은 정관 하에 가능)	2026.09.10 (시행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 인원 충족 필요)

[자료] 한국ESG연구소 정리

2.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방안으로 인한 기관투자자 영향

- 금융위원회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 발표(2025.12.29.)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12개 이행점검 항목으로 표준화됨. 특히 [제5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상세 사유 공개와 [제6원칙]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가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즌 기관투자자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특히 반대 논거)를 상세히 기록하고 공개해야 하며, 이는 자산소유자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핵심 평가지표로 작용할 전망.

3. 공시제도 개선

- 주주총회 표결 결과(찬반 비율) 공시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이행 현황 및 예측가능성 제공, 임원 보수 정책(TSR, 주식기준보상 등) 공시 등. 이는 ‘결과 공시’에서 ‘근거가 남는 공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주주총회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ESG Trend

II. 2026년 한국ESG연구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한국ESG연구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특히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보수 산정의 투명성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음.

표 2. 2026년 한국ESG연구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기업	조항	의미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개정	III.5.1. (집중투표제) ①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적용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안건을 분리하여 상정하는 경우 반대한다.	- 최근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심사 범위를 기존의 '배제 조항 신설 반대'에서 '제도 도입 찬성 및 기존 배제 조항 유지 반대'까지 전면 확대하여 법적 정합성 확보 - 법무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실질적 작동을 방해하는 우회적인 무력화 시도 차단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신설	III.4.4. (전자주주총회)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배제하거나 주주의 전자적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주주총회 현장개회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한다.	- 상법 제542조의14 신설에 따라 주주의 시간적·장소적 제약 해소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안건에 대한 찬성 원칙 정립 - 기술적 결함이나 불합리한 절차를 통해 주주의 전자적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도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구체화
독립이사 관련 기존 조항 명칭 변경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인 2026년 7월 22일까지 개정을 유예하기보다, 독립이사제 도입 취지(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감독 기능의 실질적 강화)를 반영하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일괄 변경하고 강화된 독립성 기준을 적용
성과보수정책 관련 조항 보완	V.1.4. (성과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시) ① 회사가 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 지급 근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연동형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성과 연동형 보수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성과 측정의 지표(KPI) 및 그 설정 근거 - 단기 및 장기 성과 보수의 배분 비율과 지급 시기 -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	이사 보수 정책의 단순 수립 여부를 넘어, 성과 측정의 핵심인 핵심성과지표(KPI)와 그 설정 근거, 단기 및 장기 보수의 배분 비율, 현금과 주식 보상의 비중 등 구체적인 항목의 공시를 찬성 판단의 필수 전제로 명시함
임원 보수 공시대상 확대	V.1.7. (임원 보수 공시 확대) ① 개별임원의 보수 공시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에 찬성한다. ② 개별 임원 보수 공시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하는 미등기임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안에 찬성한다.	임원 보수 공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진과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상 체계의 객관적 검증 가능성을 높여 성과 중심의 책임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독립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 정비	VI.1.2. (독립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독립이사 및 감사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단, 부여된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찬성한다.	- 독립이사와 감사는 공정한 감독과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특히 단기적 주가 부양을 위해 잠재적 리스크를 묵인하거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을 차단 - 독립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원칙적 반대, 보상의 성격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도록 퇴직 전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찬성
임원 퇴직금 지급 결정권한 주체 변경 관련 조항 정비	VII.1.1. (퇴직보상금) ②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안에 반대한다. 단, 이사회로 결정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지급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그 수준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 찬성한다.	실무적으로 상법상 보수 총액 범위 내 세부 집행의 이사회 위임이 보편화된 점을 수용하여, 기존의 엄격한 반대 원칙을 경영 효율성 관점에서 유연하게 보완

[자료] 한국ESG연구소 내부자료

ESG Trend

III.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Focus On

1.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총회 안건 영향

- **(정관 변경의 건: 형식적 정비 vs 실질적 개선)** 상당수 상장회사들이 개정 상법을 반영하기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임. 해당 안건들이 법령 준수를 위한 형식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재설계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임원 선임의 건: 규제 강화 우회전략 감시)** 독립이사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3%를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규제 시행 시기가 상이한데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 有.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하는지를 면밀히 심사할 것.
-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셀프 보수결정 제동)** '25년 4월, 대법원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을 의결할 때 해당 회사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판 2025다210138)을 확정. 기업들이 전체 이사 보수 총액한도를 승인할 때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았던 실무관행에 제동을 건 것. 한국ESG연구소는 해당 안건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지, 독립적 보수위원회가 실질적 심의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할 예정.

2.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목 기업

- 정기주총이 집중된 3월은 지배구조 이슈가 공식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시기. 특히 경영권 분쟁 기업, 소액주주 연대 활동이 관찰된 기업, 행동주의 투자자 관여기업은 이때를 전후로 이사회 구성과 주주가치 제고 방향성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주목도 높음.

표 3. 경영권 분쟁 기업 중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목 기업

기업	분쟁주주 지분율	현황 (2026.02.06 기준)
고려아연	① 영풍·MBK 등(41.30%) ② 최윤범 등(19.11%)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으로 사법 절차 및 감독 당국 조사 진행 중. '△영풍 측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순환출자 구조 형성의 사법적 판단 및 공정위 의결, △美제련소 합작투자 관련 유상증자 신주발행 무효소송, △금감원의 영풍·고려아연 회계감리' 등의 결론이, 캐스팅보트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일반주주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 줄 것 예상 ▶ 주목 포인트: 최윤범 회장 등의 이사 재선임 안건 통과 여부 등
하나마이크론	① 약 1,720명 소액주주 연대(7.44% 추정) ② 최대주주 등(26.36%)	2025년 9월, 법원은 인적분할을 의결한 7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위임장 조작' 주장에 대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절차 하자'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됨 ▶ 주목 포인트: 소액주주 연대의 추가 사법 대응 가능성, 소액주주 추천 이사·감사 선임안 상정 여부
오스코텍	① 소액주주 연대 ('액트' 결집 12.17% 추정) ② 최대주주 등(12.67%)	2025년 12월, 정관상 '주주제안권에 따른 이사 선·해임' 시 발행주식 80% 이상 찬성을 요하는 초다수결의제 조항 무효 판결. 최대주주 지분율 12%대로 낮은 가운데 전년에 이어 소액주주 결집되고 있어 이사회 구성 변화 가능 ▶ 주목 포인트: 소액주주 연대 추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후보 추천·표결 결집 수준)
셀트리온	① 윤모씨 외 1,230명(1.71%) ② 최대주주 등(30.34%)	2025년 9월, 일부 주주(윤모 씨 외 1,230명, 1.71%)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했지만 제출 자료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아 개최가 성사되지 않음. 다만 주주행동이 제도적 요건 단계에서 정리된 만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식 주주제안 형태로 이슈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점검 필요 ▶ 주목 포인트: 소액주주 연대의 주주제안
신대양제지	① 약 290명 소액주주 연대 ('액트' 결집 13.55% 추정) ② 최대주주 등(59.78%)	소액주주 측은 과도한 자기주식 보유(26.67%)의 전량 소각, 오너 일가 편중 이사회 구성(사내이사 6명 중 5명), 사외이사 출석률 문제 등 지배구조 재편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 최대주주 등 지분율이 60% 내외로 일반 안건에서는 표 대결 실익이 제한적이나,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3%를 변수가 될 수 있음 ▶ 주목 포인트: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적용으로 소액주주 추천 감사가 선임될 가능성

[자료] DART상 각 기업의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분기보고서' 공시, 미디어, 한국ESG연구소 정리

ESG Trend

2.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목 기업 (계속)

- 행동주의투자 관여 대상 기업 역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요구사항의 성패가 가려질 것으로 보임. 주주총회 전 단계에서 공개·비공개 서한 발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이슈 제기 자체를 넘어 정기주주총회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설득·압박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배당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이사회 진입(이사 선임) 등 핵심 안건의 통과 여부는 향후 추가 지분 확대나 주주제안 재도전 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한국ESG연구소는 주요 행동주의 투자자 채널(홈페이지, 공개자료)과 미디어 동향을 종합하여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주목할 만한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4. 행동주의투자 관여 기업 중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목 기업*

기업	주도 펀드 및 지분율	현황 (2026.02.06 기준)
LG화학	팰리서캐피탈 (1% 이상 추정)	2025년 10월,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이사회 개선과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진 보상제도 개편, 수익률을 지향하는 자본배분 체계 시행, 80%에 달하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현물 대가로 활용하는 자사주 매입을 제안 - 팰리서캐피탈은 2023년에 삼성물산, 2024년에 SK스퀘어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한 바 있음
코웨이	얼라인파트너스 (4% 이상 추정)	- 얼라인파트너스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4개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을 한 데 이어, 2026년 1월 30일까지 '현재까지의 기업가치 제고 이행현황 및 밸류업 계획 수정안 공시'를 요구함 - 얼라인파트너스는 해당 수정안 공시 및 내용에 따라 이후 주주행동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DB손해보험	얼라인파트너스 (1.9% 추정)	2026년 2월,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해보험의 비효율적 자본배치와 저조한 주주환원이 저평가된 주가의 원인이라 지적 - 아울러, 3월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2인 추천 건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안을 제안
태광산업	트러스트자산운용 (5.69%)	최근 애경산업과 동성제약 인수 결정, 자금 조달 위해 자기주식(24%)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 11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반대로 교환사채 발행 철회함
리파인	머스트자산운용 (9.85%)	2025년 9월, 머스트자산운용은 리파인이 같은 해 4월 신규 대주주 지분율 확대에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시 가격과 조건이 소액주주에게 불리했다고 지적하며, 10월 교환사채 발행 무효화 소송을 제기
가비아	얼라인파트너스 (13.30%)	2025년 11월, 얼라인파트너스는 20일 간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여 13.30% 확보함 - 최대주주 등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율은 25.81%
솔루엠	얼라인파트너스(8.04%) 및 소액주주연대 (‘액트’결집 8.79% 추정)	- 얼라인파트너스 및 소액주주연대는 2025년 발행한 1,200억원대의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최대주주 지분율 확대 및 경영권 방어용이라 비판하며 무효 소송 진행 중 2026년 1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결집된 주주 연대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를 정관 내 규정하는 주주제안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한국토지신탁	쿼드자산운용 (3% 추정)	2025년 1월, 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쿼드자산운용은 자사주는 소각을 통해 기존 주주의 주당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할 자산이며, 1,08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반발

* 이외 KCC, 스티크인베스트먼트, 에이플러스에셋, 롯데렌탈, 덴티움, 노루홀딩스 등 사례는 한국ESG연구소 홈페이지 [‘2026년 정기주주총회 Preview’](#) 폴 버전에서 확인 가능

[자료] 각 펀드 홈페이지, DART상 각 기업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미디어, 한국ESG연구소 정리

ESG Trend

2. 2026년 정기주주총회 주목 기업 (계속)

- 2025년 4월 대법원은 남양유업 사건에서, 주주인 이사가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동 판결의 파급은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 관행처럼 지배주주·경영진이 사실상 보수 한도를 '셀프 승인'해 온 회사에서 정족수·가결요건 산정의 적법성과 결의 취소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된다는 데 있음.

※ 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가정 시,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부결로 바뀌는 기업(32개사)

태양금속공업, 서연, 대한제강, SK디스커버리, DS단석, 비에이치, 한국엔컴퍼니, F&F홀딩스, 도화엔지니어링, 동방, 엠씨넥스, KC그린홀딩스, 세진중공업, 서원, 신성이엔지, 금양, 디와이덕양, TP, 한진중공업홀딩스, 엘브이엠씨, 인지컨트롤스, 대동, 삼화페인트공업, 경인양행, 신대양제지, 대성산업, 자화전자, 덴티움, 풀무원, 농심홀딩스, 한미반도체, 휴스틸

[자료] 이수정(2026.01.22), 「2025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주총 결의 시 특별 이해관계자 제한 현황」,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2026-01호

3.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변환 가능성

-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과 맞물려 8대 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클로백 도입 등) 개편이 주요 이슈임. 다만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곧바로 '새 제도'의 전면 적용 국면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 이미 일부 금융지주는 회장 후보 추천 및 사실상 연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예: 신한·우리 등), 제도개선이 확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3월 주주총회는 감독당국의 메시지와 시장의 시선이 결합되는 첫 시험대로서, (i) 회장 선임안건의 설명 논리, (ii) 이사회/위원회 구성의 정합성, (iii) 성과보수·평가체계의 투명성이 '표결'과 '사후 평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 국민연금의 참여가 거론·보도되는 점은 변화의 폭을 키울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 주요주주가 제도 설계 단계부터 논의 테이블에 들어올 경우, 기존의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판단'에 더해 주주 관여(검증 및 설명 책임) 강화라는 축이 추가되면서 CEO 선임·연임 프로세스 전반이 재정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금융지주명	현 회장 / 임기만료일	차기 회장(후보)결정일	차기 회장 후보 명	차기 회장 선임 시기
KB	양종희 / 2026.11.	선임절차 미개시	-	2026.11. 임시주주총회
신한	진옥동 / 2026.03.	2025.12.04.	진옥동	2026.3. 정기주주총회
하나	함영주 / 2028.03.	2025.03. 선임 완료	-	-
우리	임종룡 / 2026.03.		임종룡	2026.3. 정기주주총회
농협	이찬우 / 2027.02.	2025.02. 취임	-	-
BNK	빈대인 / 2026.03.	2025.12.	빈대인	2026.3. 정기주주총회
iM	황병우 / 2027.03.	-	-	-
JB	김기홍 / 2028.03.	2025.03.03. 연임 확정	-	-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2월호에서는 2월 중 신청 가능한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 탄소중립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사업예산	신청기간	사이트
실시·설계 지원,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1천만원 내)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업체별 최대 3억원, 부가세 제외)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가 아닌 중소기업	약 151 억원	2. 10.(화) ~ 3. 4.(수) 16:00까지	링크

| 산업안전 | 고용노동부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품목(분야)	지원대상	사업예산	신청기간	사이트
안전동행 지원 사업	공정개선설비 일체	50인 미만 제조업 등	3,320억 원	'26. 2. 13.(금) 10:00 ~ 일선 기관별 자원 소진시까지	링크
안전일터 조성 지원 사업	시스템 비계/동바리 등 건설 현장 재해예방설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534억 원	'26. 1. 2.(금) ~ 일선 기관별 자원 소진시까지	링크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272억 원		
	스마트 안전장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370억 원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예방 설비	1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429억 원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사업	•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 고용부/공단 기술사업과 연계해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 지원) •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민간기관 으로서 공단이 고용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	'26. 1. 2.(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링크

[참고] 2026년 중대재해 관련 제도 현황

구분	상장회사 중대재해 즉시 공시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근거법/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6.1.29.국회 의결, 공포 대기중)	좌동
시행 시기	2025년 10월 20일 (기시행)	2026년 6월 1일	2026년 8월 1일
공시 주체	상장회사 (자회사·종속회사 포함)	고용노동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요 개요	중대재해 발생 고용부 보고 당일 거래소에 신고(DART 공시)	재해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조사보고서 원문 공개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6.12.1. 이후 발생 산재부터 적용	안전보건 현황 의무 공시
공개 내용	- 재해 일자, 고용부 보고일자 - 재해 장소, 유형, 피해 현황 - 조치 및 전망, 형사 판결 결과 등	- 재해원인조사 확대: 중대재해 + 화재·폭발·붕괴 등 - 보고서는 공소 제기 후 공개 원칙(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즉시 공개 가능한 예외사유 有)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활동 계획 - 안전보건 투자, 재발 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0.0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1.29), 한국거래소 각 자료, 2026.02.04. 오마이뉴스 등 참고 재구성

ESG Event

한국ESG연구소 「2026년 상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개최

한국 ESG 연구소

상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2026. 02. 10. (화) 15:00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대강당



참가신청



목적

- 2025년 2차 KRESG 평가결과 및 책임투자 통합 솔루션
- 2026년 주주총회 프리뷰 및 KRESG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관련 대응 및 사례 소개

진행개요

일	시	2026. 02. 10 화 15:00 ~ 17:00
장	소	대신파이낸스 센터 5층 대강당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참석 인원		50명 내외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5:00 - 15:05	인사말	백재욱 대표이사
15:05 - 15:30	2025년 2차 KRESG 평가결과 및 책임투자 통합 솔루션	황종현 본부장
15:30 - 15:55	2026년 주주총회 프리뷰 및 KRESG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정우영 본부장
15:55 - 16:10	Break Time	
16:10 - 16:50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관련 대응 및 사례 소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 센터장
16:50 - 17:00	네트워킹 및 마무리	



국내 대표적인 의안 분석, 수탁자 책임활동 지원 및 ESG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는 2월 10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ESG연구소 평가본부 황종현 본부장이 2025년 2차 ESG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책임투자 통합 솔루션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거버넌스본부 정우영 본부장이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한국ESG연구소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변경 내용을 공유하였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및 주목해야 할 기업,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변환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책임투자전략센터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관련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특히 의안분석 관점의 리스크 요인과 의결권 행사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다.

한국ESG연구소는 "앞으로도 관련 세미나와 리포트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전략 수립과 수탁자 책임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2026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가 지난 1월 29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개최된 '2026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주주총회 환경과 기업 거버넌스 제도 개편 흐름 속에서 상장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첩한 거버넌스, 신뢰받는 기업'을 주제로 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가 주주총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유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법, 제도 변화가 주주총회 환경을 바꾼다'를 주제로 최근 소수주주 권리 강화와 관련한 법 제도 변화가 주주총회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성철 비사이드 대표는 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으며, 안효섭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 컨설팅 센터장은 주주 신뢰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 안건 설계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적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번 포럼에는 상장기업 CFO와 IR 담당 임직원 등 약 110 명이 참석하여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이어가, 급변하는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행동주의 확산과 제도 변화라는 복합적 파고 앞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현장 중심의 해법을 결합한 '거버넌스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아름다운가게 '그물코 프로젝트 2025'의 사회적 가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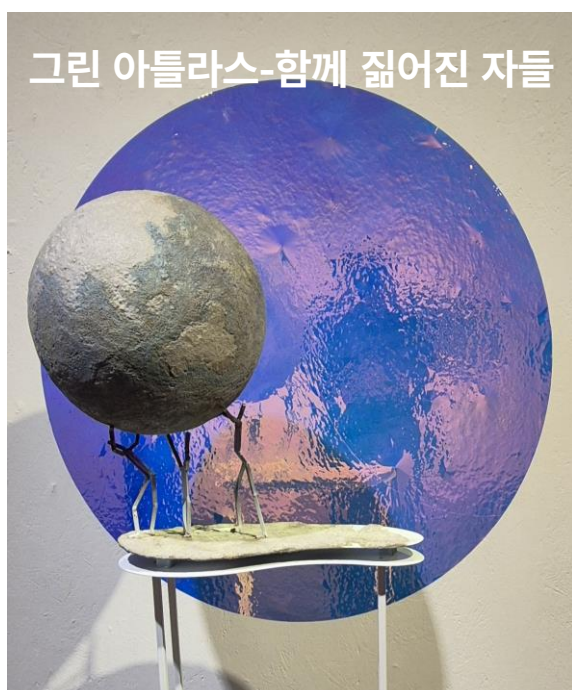


그물코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의 여정을 돌아봄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전파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전시·포럼이다. '그물코'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모든 생명과 무생물이 서로 연결된 관계망 속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아름다운가게의 자원순환 노력에 동참하고자 '그물코 프로젝트 2025' 전시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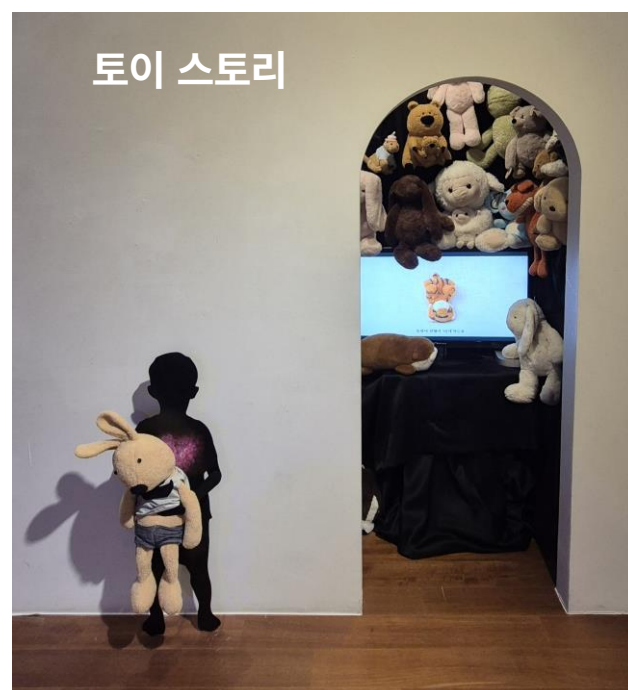
'그물코 프로젝트 2025'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성수동 헬로우뮤지움에서 진행된 본 전시에 이어, 12월 2일까지 경기도 양평 대아초, 수원 당수초, 남양주 금곡중, 서울 다원학교(장애인 특수학교)까지 '찾아가는 순회전시'로 진행되었다. 총 3,248명(이 중 순회전시 1,105명)의 관람객이 전시를 찾았으며, 565명은 작가와 함께하는 심화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원순환의 의미를 더욱 깊이 체험했다.

본 전시는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창출했다. 우선, 물품을 재사용 혹은 업사이클링함으로써 약 14.2톤(CO2e)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다양한 가치 중에서는 특히 전시 참여로 인한 환경교육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지역사회 소득 창출, 환경교육, 중고물품 판매 등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4,8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도 그물코 프로젝트를 통해 끊어진 그물코가 연결되고 '함께'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사람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음을 표현



애착인형처럼, 누구나 애착하는 물건이 있음. 단순히 사용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물건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의 작품



기부받은 의류를 자르고 꿰매 만든 인형들.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인형들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같은 사람은 없음을 표현함. 이 작업은 지역사회 경력단절 여성들과 함께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음



"낡고 오래된 것이라도 다 그 나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